

환율제도 변경이후의 최근 아르헨티나 정세

- 2002년 1월 6일, 두알데(Duhalde) 정부가 긴급경제법안을 통과시킴으로서 1991년부터 시행되어온 아르헨티나의 태환제도는 폐지되었음.
- 동 법안은 ① 사회·경제 긴급비상사태 선포, ② 페소와 달러간 1:1 태환 폐지, ③ 금융채무·임대차 계약 및 공공서비스 요금의 페소화 전환, ④ 유류 수출세 부과 등이 주요 내용으로,
- 특히, 환율에 대해서는 수출입 및 금융거래 등에 적용되는 1:1.4 페소의 고정환율 및 다른 민간거래에 적용되는 완전 시장자유환율을 병행한 이원환율제(dual currency)시행을 그 내용으로 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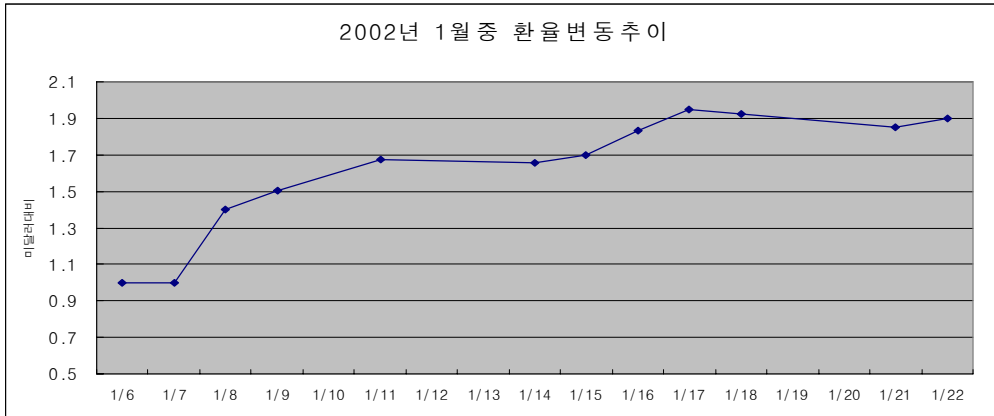
I 환율제도 변경이후의 최근 아르헨티나 정세

1. 페소화의 폭락과 금융체제 붕괴위험

- 2001년 12월 21일 시장 잠정폐쇄 이후 처음 개장한 외환시장에서는 페소화 가치가 미 달러당 1.75페소까지 하락하는 폭락세를 보였으며 현재는 1.9페소 선에서 거래되고 있음.
- Moody's는 1월 18일 Banco Rio de la Plata와 HSBC Bank Argentina를 비롯한 6개 아르헨티나 은행들의 신용등급을 기존 E+에서 최저 등급인 E로 하향 조정하였고,
- 아르헨티나의 금융체제가 태환제도 포기에 따른 부채의 확대와

금융통화정책 부재에 따른 붕괴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였음.

<그림1>



자료: Bloomberg

2. IMF와 국제사회의 지원여부 불투명

- 현 시점에서 아르헨티나를 지원할 수 있는 곳은 예금의 50%를 점유하고 있는 외국계 은행과 IMF가 유일하지만, 통화정책과 법령의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는 상황에서 외국계 은행의 지원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임.
- IMF는 2001년에 아르헨티나 정부와 220억 달러의 자금공여협정을 체결하였으나, 아르헨티나 정부가 자금인출의 선행조건인 재정수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함에 따라 자금공여를 유보하였음.
- 또한, 두알데 정부의 이원환율제 발표에 대해서도 실현 가능한 중장기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, 추가적인 지원이 불가능함을 경고함.
- 이에 대해 아르헨티나는 자국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IMF의 지나친 간섭은 금융지원을 필요로 하는 국가들의 상황을 개선시키기보다는 악화시켰다고 반박하면서, IMF와 아르헨

티나 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되었음.

- 그러나, 1월 17일, IMF가 9억 3,300만 달러에 대한 상환을 향후 1년 간 추가로 연기해 주었고, IMF의 실질적인 대주주라 할 수 있는 미국 행정부도 아르헨티나가 건전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 계획을 추진한다는 조건으로 지원의사를 표명함으로써, 양자간 관계는 다소 호전되고 있음.

3. 정치·사회적 불안 재연

- 급격한 예금인출사태를 막기 위해 2001년 12월 3일부터 시행된 예금동결조치로 인한 정치, 사회적 불안은 현 정부가 사태 해결을 위한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자 다시 재연되고 있음.
- 1월 21일 발표된 달러화의 페소화계좌 전환방침(pesofication)은 예금 인출 제한조치(corralito)에 대한 일반 서민의 불안을 다소 완화시키려는 두알데 정부의 시도임.
- 그러나, 이러한 정책이 대규모 통화발행 → 페소화의 추가 폭락 → 인플레이 확산 → 자산가치 감소라는 악순환을 가져올 것이라는 부정적 시각도 존재함.

II 향후 전망 및 추이

- EIU와 Morgan Stanley는 2002년 아르헨티나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당초 예상치 보다 크게 낮아진 -7.0%, -7.2%로 조정했으며, 경제위기가 단기간 내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.
- 그러나, “아르헨티나 경제회복 국제위원회” 결성 및 Mercosur 국

가들의 지원약속 등 국제사회의 지원, 그리고 페소화 평가절하에 따른 수출 및 외국인투자의 증가 등 긍정적인 면도 배제할 수 없음.

- 결국, 향후 사태의 조기수습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변수는 1월중 예정된 아르헨티나와 IMF의 150억 달러규모의 신규 차관지원협상 결과 및 페소화전환(pesofication)의 성공여부, 그리고 정치권의 국민적 합의 도출 등이 문제해결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임.